경주 강진이 남긴 과제는

한국도 지진 위험… '문화재 재해法·기금' 화두

석조문화재 20% '위험' 조사돼
대다수가 석탑… 보존 취약해
전문가 "보강 장치 설치" 주장

日 불교 안전 우선해 내진 설비
사찰마다 지진 예방지도 제작도
아오키 교수, 本紙 인터뷰 통해
"문화재 재해법 제정 필요" 주장

기초 연구했지만 정책 반영 無
문화재 내진 시설 논의 필요해
"지진·화재 복합적 대비해야"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한반도가 들썩였다. 특히 불국사·석굴암 등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산재된 고도인 만큼 90여 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기정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내진장치 연구와 도입,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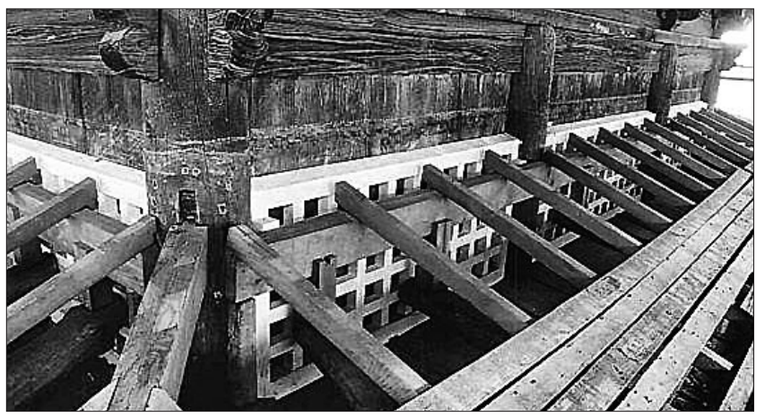
석조문화재는 지진 위험군

문화재청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문화재 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로 작성했다. 2013년 한국지진공학회가 연구한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석조문화재 20%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진공학회는 연구를 위해 152개소의 석조문화재를 조사했고, 30개의 석탑·전탑·석교를 '위험' 군으로 분류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석조문화재는 2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보통' 등급이었다.

한국지진공학회는 당시 연구보고서에 "경계나 위험구간에 포함된 석조문화재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보수·보강 후 관리 중점대상으로 두고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내진 진단 매뉴얼의 기초 점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연구를 진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두 권의 기초연구 조사와 진단 매뉴얼이 나왔지만, 문화재 내진 설비에 대한 기초적 법령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건축법을 통해 건물 등 9가지 시설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화재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사찰을 포함한 한옥도 역시 내진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에도 목조건축물의 경우 "지진 하중에 견딜만한 강성을 지녀야 한다"고만 규정돼있을 뿐이다.



일본 국보인 기후현 에이호우지 관음당의 내진장치. 목재를 덧대 좌우 진동에 버틸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아오키 시게오 교수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찰을 포함한 목조건축물은 돌로 기단을 쌓아 하부를 받치고 상부에 무거운 지붕을 얹는 구조여서 지진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야외에 있는 문화재 중 통돌로 된 석탑을 제외한 석탑, 모전탑, 석등 등도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보강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 우선' 日의 내진 설비

그렇다면, '지진의 나라' 일본의 문화재 내진설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1995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으로 문화재 피해조사를 진행한 아오키 시게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는 本紙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인 건물, 동산인 불상 등으로 대응이 달라진다. 건물에 대해서는 참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반적으로는 내진 진단을 하고 건물이 본래 갖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며 내진보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가 기술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 같은 안전 의식을 가늠할 수 있다. 17세기에 건립된 일본 니이가타현 조코지 본당은 진도 5.0의 지진에도 건물 전체가 기울어 질 수 있다는 진단 하에 건물 전체에 철골 프레임을 설치했다.

내진설비와 문화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군마현 키류시의 히코베가 가옥은 외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벽 내부에 두꺼운 합판을 설치하고, 보강용 철골기둥 겉에 토벽을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오키 교수가 제공한 자료에도 비슷한 보강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기후현 에이호지 관음당은 목재를 덧대 진동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했다.

지진 대응 인식도 높여야

전문가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불교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찰의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내진·예측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진영 경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시 문화재 안전 확보에 관한 지침과 중요 문화재 건조물 내진진단지침을 정해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년 통합재해예방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지진 발생에 대한 인식부터 고취시켜야 한다. 지진은 반드시 화재를 동반한다.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오키 교수도 "일본은 사찰·마을마다 지진 피해 예상지도와 행정지도가 작성돼있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전도 방지 대책과 낙하방지 대책 등을 꾸려야 한다"면서 "정부와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재해 대책의 기반이 되는 기본법 제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기금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문화재 수리, 이젠 가격 아닌 실력으로

문화재청, 21일부터 '최고 가치 낙찰제' 시행

현재까지 사찰 등 문화재 수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가격 중심의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격이 아닌 업체의 실력이 문화재 수리 사업의 우선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 시 가격 외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부실 수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부터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렵 법규 정비를 진행했고, 공청회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예규를 마련했다.

이번 예규에 따라 문화재 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하여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계약예규 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최적합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부실 수리 방지의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공식여론조사 한다

직선제특위, 10월 중 리서치 실시
법계별 표본 1000명 구성, 전화 설문조사 방식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선거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종도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 이하 직선제특위)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직선제특위는 지난 8월 23일 3차 전체회의에서 법계별로 직선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특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두차례 있었다. 2008년 불교사회연구소 직선제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2015년 대중공사의 직선제 여론조사는 대중공사 회차별 중복참여가 가능한 즉석리모콘 투표가 진행돼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리서치회사에 의뢰하는 것을 골자로 법계별 표본을 무작위 추출, 이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표본 추출범위는 직선제 선거권자로 가닥이 잡힌 법랍 10년 이상 비구·비구니 스님으로 총 8000여 명이다. 현재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각각 4000 여명인 상황에서 동수인 500명씩이 법계별 구성에 따른 비율로 표본으로 추출된다.

여기에 법계별 인적구성에 따라 표본이 추출될 예정이다. 표본 추출은 법계내 무작위로 진행되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위원장 태관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대중공사에서의 여론조사는 재가자 의견이 대량 포함된 반면 정작 선거권자인 스님들의 의견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선거권자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종헌이 개헌돼야 하는데 나라에서도 개헌시 국민투표 등을 실시해 반영한다. 최소한 종헌 개정을 위해서는 종단이 대중의 뜻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해 한다는데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목종 스님도 "이번 기회에 종단 스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선제특위에서는 11월 1일 개회 예정인 종회 상정까지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설문조사 기간이 3주간 진행되며, 이후 분석까지 약 1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종훈)는 9월 22~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주제로 워크샵을 열고 직선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변화에 맞춘 선거관리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노덕현 기자

우희종 교수, 조계종 폄하 발언에 파문 확산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팟캐스트 '쇼! 개불릭'에서 조계종과 한국불교를 비판한데 이어 발언 내용을 묶은 책 〈쇼! 개불릭〉을 펴낸데 대해 불교계 안팎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9월 20일 성명을 통해 "〈쇼! 개불릭〉 전량폐기 및 공개참회를 요구했으며, 미응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특히 '한국불교는 변태불교다' 등의 말을 통해 한국불교 전체를 모욕한 우희종 교수에게 실망과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신도회(회장 김의정)도 우희종 교수의 사과 및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계사신도회는 "특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사태에서의 조계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 신도 등의 노력을 폄하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봉 (사)범불교조계종 창종 수계 대법회 및 종도 모집 축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번호 : 191321-0001925

불기 2560(2016)년 10월 29일(음, 9월 29일) 토요일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번지 / 055-351-3689)

총무원장 **범성 대명** 010-3193-3689

종도 모집 안내

❶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전법사 등록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1부
- 법당사진(내, 외) – 1부 / 사찰 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4매
- 계좌번호 : 농협 351-0902-3064-63 / (사)범불교조계종

❷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전법사,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사)범불교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은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일체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